

## 최북단 도라산역 통일기원 법회

8·15 불교단체 연석회의…생후 22개월 아이도

“불이(不二) 가르침에 따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듯 남한과 북한도 둘이 아닙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수미산을 담은 한 톨의 겨자씨, 바다를 담은 한 방울의 이슬이 돼 훗날 통일이라는 거대한 산과 바다를 이루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진호스님의 법문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분단 70년 광복절을 1주일 앞둔 지난 8일,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도라산 평화공원에서는 불교계 단체 9곳이 참여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평화통일 기원 법회가 한창이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땅이자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발점인 민통선을 찾아 70년의 세월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가족 단위로 온 참가자 외에도 말레이시아와 멕시코에서 온 외국인 청년들, 분단 후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 등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중에는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온 부모도 있었다. 인용민

씨는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뜻 깊은 장소에 가족과 같이 오고 싶었다”며 “하루 빨리 통일이 돼 도라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땅을 밟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법회 후 참가자들은 철책선 너머 보이는 북한을 향해 통일을 염원하는 만세 삼창도 있지 않았다. “불자들 소원은 남북통일” “우리는 하나다” “이 땅이 평화로워지길” 등의 문구가 적힌 리본을 철망에 묶으며 분단의 아픔이 하루 빨리 치유되길 기원하기도 했다. 말레이시아인 홍찬란 대한불교청년회 국제팀 간사는 “얼마 전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영상을 보다가 91세 할머니가 ‘북에 있는 가족을 살아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며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한국의 분단 상황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도라산역 내에서는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의 특별 강연도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이 본 도라산역전경은 여느 기차역과 다름없었지만, 기차는 멈춰서 있었다.

파주=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광복 70주년 8·15 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가 지난 8일 민통선 내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평화통일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통일을 염원하는 문구가 써진 리본을 달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

## “가천리·봉성寺址 원형 보존돼야”

조계종 입장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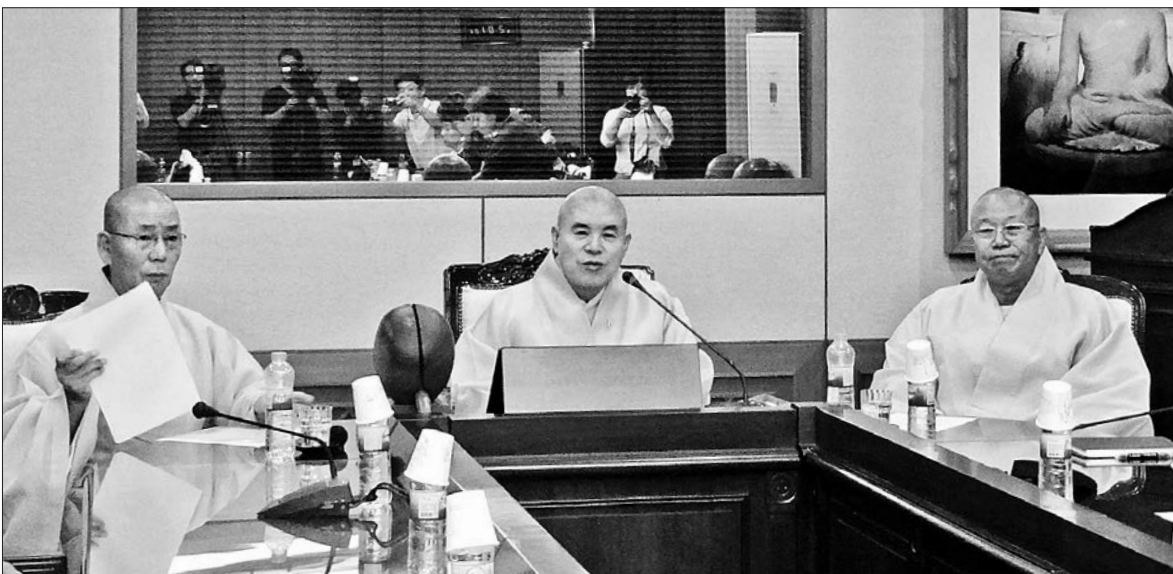
조계종이 함양울산고속도로(고속국도 제14호선) 건설공사 구간 내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의 사지(寺址)인 ‘울산 가천리사지’와 ‘밀양 봉성사지’의 원형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해일스님과 조계종 대변인 일감스님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속국도 제14호선 공사 구간내에서 발견된 울산 가천리사지와 밀양 봉성사지 등 사지들은 원형 그대로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일스님과 일감스님은 이어 “특히 가천리사지에서 발견된 사찰 유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찰 유물까지 확인될 뿐만 아니라 금당지, 강당지, 회랑지, 석탑지 등의 사찰 주요 시설과 부속 시설이 확인될 만큼

중요한 절터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에 합당하게 보존, 정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조속한 공사중단 및 올바른 보존 대책 마련 △정밀발굴조사 실시 △진정성 담긴 사지 보존정비안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형보존 기준평점에서 가천리사지와 봉성사지가 94점, 88점을 각각 받을 만큼 보존 필요성이 높지만 정부는 봉성사지만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부장 해일스님은 “가천리사지는 통도사만큼 큰 사찰이 있었다는 구전속의 대찰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철저한 발굴조사가 시급하다”면서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 중앙총회의장 성문스님(오른쪽), 전 총무원장 법등스님(왼쪽)이 지난 10일 기간담회를 갖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후보자 추천에 이어 중정예하가 추천하는 방식을 골라온 ‘엄화미소선거법’을 제안했다.

## 선거 폐해·직선제 한계 극복 대안

■ ‘엄화미소 선거법’ 어떻게 나왔다

“종단의 오랜 전통 ‘대중공의’ 방식 94년 개혁 산물 민주화 장점 선택”

지난 10일 전 호계원장 법등스님이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 가장 ‘엄화미소법’을 제안했다.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이를 중정예하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간접선거를 통해 총무위원장을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중앙총회의원 81명과 각 교구에서 10명씩 선출된 240명의 선거인단 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무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금권선거 의혹과 종책모임의 이익 집단화, 종단 주요 사찰 및 직책에 대한 거래 등이 문제로 지적돼 개선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선거 이후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잦았다.

그동안 제34대 집행부는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공청회를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직선제에 대한 절충안으로 총무원이 제안한 ‘준 직선제’는 승랍 20년 이상의 비구 스님과 비구 선거인단의 25%를 비구니 스님에 배정해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종단쇄신위원회가 제안한 ‘선추천 후 선출제’는 선·교·율 등 종단의 신망 받는 인사가 참여하는 ‘총무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3명을 먼저 추천하고 교구총회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총무원장 직선제 실현 사부대중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비구·비구니 스님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법등스님의 ‘엄화미소법’ 제안은 현

행 선거제도가 갖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준 직선제 및 직선제가 현실적으로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총회의장 성문스님도 이같은 입장에서 법등스님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엄화미소법’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등스님은 “작금의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금권선거의 폐해가 극심해 종단의 대외적인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엄화미소 선거법은 대중공의와 민주화 방식의 장점을 선택한 선거제도”라고 밝혔다. 총회의장 성문스님도 “(법등스님의 제안을) 큰 틀에서 협의회가 됐던 위원회가 됐던 논의해 나가고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총회에서 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엄태규 기자의  
현장에서  
che11@ibulgyo.com

## 대중공사 후속조치 사부대중에 달렸다

최근 만난 한 스님과 재심 논란을 의제로 다룬 5차 100인 대중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중공사 논의 결과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재심 논란을 다루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스님은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앞으로 흐지부지되지 않고 잘 진행돼 논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차 대중공사 후속조치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 모습이었다.

재심 논란을 다룬 5차 100인 대중공사가 불교계 안팎의 관심 속에 진행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이번 대중공사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여는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중공사 직후 나온 불교계 단체들의 비판적인 논평과 일부

우려의 목소리들도 5차 대중공사가 갖는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5차 대중공사 참가자들은 재심결정은 개혁 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고,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총회와 총무원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사부대중이 참여해 문제의 해법을 찾고 지혜를 모으는 100인 대중공사의 결정은 강제성이나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종단 집행부를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선원, 강원, 율원, 비구니 스님 및 재가자, 불교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여론을 대표하는 이들이 참여하고 논의 결과가 종책에 반영

된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 대중공사 추진위원회 역시 5차 대중공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를 통해 대중공의 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5차 대중공사 후속조치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대중공사가 끝났다고 재심논란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에 미진한 점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사부대중의 몫일 것이다. 추진위원회 역시 이같은 사부대중의 기대와 우려를 적극 받아들여 재심 논란 해소를 넘어 종단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제4회 청호불교복지대상 공모

- 공모사업내용 :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사례 및 사회복지 연구부문
- 목적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창립자 이종대선생의 평소 신념인 요익중생(饒益衆生)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현장의 우수사회복지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또한 사회복지연구를 장려하여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사업임.

### 심사부문 및 시상내용

- 심사 부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문과 자원봉사의 프로그램 사례 및 연구업적 부문
- 응모사업 대상 조건  
프로그램사례 부문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  
연구 부문 -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서적 또는 논문
- 시상 내용  
프로그램사례 부문  
→우수상 : 2명 각500만원(기관 40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100만원)  
→장려상 : 3명 각200만원(기관 150만원, 프로그램실천사례 주책임자 50만원)  
연구 부문  
→연구서적 : 1명 300만원  
→연구논문 : 1명 100만원  
※불교 관련 사회복지프로그램실천사례와 연구의 경우 특별 가산점 부여.

### 신청자격

- 1) 프로그램사례 부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의 사회복지사업자
- 2) 프로그램사례 부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사찰
- 3) 연구업적 부문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사회복지학 및 관련학의 연구자

### 응모방법 및 접수마감

- 1) 응모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제출시 관련 내용의 서류)
- 2) 접수마감 :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인이 찍힌 제출물에 한함

### 구비서류

- 사회복지프로그램사례 부문  
1) 신청서(양식) ..... 1부  
2) 사업계획형식(양식2) ..... 1부  
3) 단체일 경우 정관 및 회칙 사본 ..... 1부  
4) 관련 증빙서류(사진, 스크랩, 평가서 등)..... 1부

### ●사회복지연구업적(서적 및 연구논문) 부문

- 1) 신청서 ..... 1부
- 2) 서적 및 연구논문..... 1부

### 수상자 발표

- 시상 시기 : 2016년 2월 초순
- 발표 : 개별 통보 및 본 재단홈페이지 공고

### 기타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연구실에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www.chbuddha.com), 이메일(ky160600@hanmail.net)
2. 재단 홈페이지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및 신청주소

- 재단사무실 : 02)517-3052, 연구소 : 02)517-3045, 010-6205-8696
- 신청 주소 : (우편 06057) 서울 강남구 언주로148길 14, 청호불교문화원 내 불교복지문화연구소

| 주최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 주관 |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이종욱 합장